

# 양극화 축소,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의 초석

김미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보건복지포럼 2023년 2월 '이달의 초점'의 핵심 단어는 양극화이다. 양극화는 어떤 자원 분포의 양극단(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존재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아래쪽에 많은 사람이 분포한다는 것은 빈곤층의 증가와 맥을 같이한다. 유사한 개념으로 불평등이 있다. 불평등은 전 계층의 자원 분포에 관심을 갖는 지표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개념은 다르다. 하지만 실제 지표를 산출해 보면,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두 개념을 혼용하기도 한다. 두 개념 모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다. 덕담을 나누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오랜 관행인데 이를 거스르는 느낌이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한가하거나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 주제 선정과 기획의

도로 읽힌다.

콜린스 영어 사전이 2022년을 상징하는 단어로 '퍼머 크라이시스(perma-crisis)'를 선정했다. 영구적(permanent)이라는 말과 위기(crisis)를 합친 단어로 위기가 매우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3년에도 코로나19의 풍토병화(endemic),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제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G1)과 중국(G2)의 갈등, 에너지 위기, 기후재난,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 등이 다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 위기들이 서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과 통제 불가능성이 커지는 글로벌 복합위기(global poly crisis)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우리 사회는 타협이 아닌 증오의 정치와 경제적 성장 지상주의라는 신

념에 빠져 있는 듯하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문제는 다소 먼 미래의 문제로, 사회적 지속가능성 문제는 경제적 성장의 부산물로 치부되어 공론장에서 멀어지는 느낌이다. 그러나 우리의 각종 사회 지표들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최저 수준의 출생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증가 추세인 불평등·양극화, 낮은 행복도 등으로 우리 국민은 시들면서 줄어들고 있다. 바람직한 사회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동시에 높으면서 조화를 이룬 사회이다. 성장 지상주의만으로는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무분별한 성장이 환경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권두언을 쓰는 이유이다. 불평등·양극화 축소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자.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다차원적인 개념이지만 단순화해 고갱이만을 추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반도에서 적정 인구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적정 출생률이 유지되고, 일정 정도의 경제 수준과 심하지 않은 불평등·양극화 상태일 때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그리고 선진국으로 진입하였다. 반면 출생률은 후진국일 때 가장 높았고, 선진국인 오늘날에 가장 낮다.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인 2.1명은 1983년에 무너졌고,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

이 2001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 2022년에는 세계 최저 수준인 0.7명대로 주저앉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생 요인은 다양하다. 불평등·양극화도 그에 속한다. 불평등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인 지니계수와 출생률·자살률의 관계를 밝힌 여유진의 연구(2016)에 따르면 자살률은 지니계수와 매우 유사하게(정의 상관관계로) 움직이고, 출생률은 매우 높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한마디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할 때 아기를 적게 낳고 자살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다. 경제적 성장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물적 토대가 될 수는 있지만 성장만으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불평등·양극화가 축소되어야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더 나아가 불평등·양극화 축소는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 과거 한때 경제성장이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었다. 소위 ‘경제성장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까지는 경제성장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낙수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1993년 이후에는 경제성장이 되어도 빈곤과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이다. 경제성장의 몫이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살펴본 필자의 ‘성장 몫 분해’ 연구(200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는 달리 낙수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분배 상태의 개선 또는 악화가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로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는 듯하다. 31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OECD 마이클 포스터의 연구(2016)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1포인트 증가하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0.12%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과 신흥국 4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박용정의 연구(2017)는 지니계수가 1단위 개선되었을 때 경제성장률은 0.1%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불평등·양극화 축소는 환경적 지속가능성도 높인다. 빈곤은 기초적인 생계 문제와 직결되므로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양극화 심화로 빈곤층이 많아지면 원초적인 문제인 생계 유지를 위해 자연을 더 많이 파괴할 수 있다. 과거 우리의 화전민이나 오늘날 브라질의 산림 파괴를 예로 들 수 있다. 리우회의 등 각종 환경회의에서 빈곤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사실 산림 등의 환경 파괴는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이것이 다시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부채질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후변화를 늦추고 한정된 자원을 지금보다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다.

이 글에서 불평등·양극화 축소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각론에서는 소득, 자산, 노동, 정치 및 사회 참여의 양극화 실태와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여러 갈등이 두 개의

대립적인 진영과 전선으로 나뉘는 극단적 양극화 전에 공론화되고 대응 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김미곤. (2005). 경제성장 몫 분해.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편),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용정. (2017). 한국, 더 이상 경제성장의 모범 국가가 아닌가?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경제주평**, 17-19(통권 744호).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여유진, 김영순, 강병구, 김수정, 김수완, 이승윤, 최준영. (2016).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복지레짐 비교를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örster, M. (2016). OECD 국가의 불평등 동향: 동인, 결과, 그리고 정책 대안. **2016년 제4차 사회통합포럼 자료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